

다산포럼

연금 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전 창 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고령화와 금융화(financialization)가 묘하게 맞물려 서로 상승 작용을 하는 가운데, 21세기 초반을 살아가는 지구촌 현대인들은 연금(pension)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경우, 국민연금은 늘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서구식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어 개인연금까지 가입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넓혀 가는 연금 제도는 도대체 어떤 속성과 기원을 갖는 것일까?

재산 신탁 제도에서 발전

우선 연금 제도와 연금 산업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양자가 금융의 영역에서 금융적 논리에 의해서만 작동·진화한다고 보는 표준 재무적 관점이나 혹은 주류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탐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연금 제도는 본

질적 성격상 해당 자본주의 국가의 노사 관계에서 유래하는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노사 관계에 내재하는 고유한 갈등과 모순이 연금 제도를 매개로 하여 금융 영역으로 옮겨온 것인 이상, 연금 문제를 논의할 때 금융적 논리와 함께 노사 관계의 갈등과 모순을 동시에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연금 제도나 연금 산업에서는 금융적 논리와 노사관계의 원리가 서로 교차하여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금 제도의 금융적 논리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리는 중세 영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탁(trust)의 원리이다. 12세기 영국에서는 유족들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유언으로 이전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유언을 통해 유족에게 토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했다. 또한 영국의 영주나 귀족이 전쟁 참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미성년자인 후손들에게 재산을 맡기더라도 이들이 미성년이라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영주와 귀족들이 그들 재산을 미성년 유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 등 제3자에게 맡기기 시작하면서 신탁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성인 귀족과 영주가 위탁자가 되고, 미성년 후손들이 수탁자가 되는데 이 양자 사이에 미성년 유족을 대신해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제3자(수탁자) 관계가 등장한다.

이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후손(수익자)들이 재산권(소유권과 운용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신탁의 원리 하에서 수익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 운영에 대한 권리를 모두 수탁자인 제3자에게 일임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익자의 지위는 늘 불안정했다. 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랐다.

마침내 수탁자와 수익자 간에 소유권의 내용적 분할(즉 수탁자에게는 보통법에 기초한 소유권 부여, 수익자에게는 신탁 재산을 향유할 수 있는 형평법상의 소유권 부여)이 이루어지고 양자 간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 장치로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 ; 신임 의무)가 설정되었다. 요컨대 신탁 원리의 핵심은 소유권의 분할 가능성을 열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수탁자 의무로 해결하는 것이다.

연금 제도가 바로 이 신탁 원리에 기초해 있는 이상, 연금 가입자(원금원어든 자영업자이든)인 수익자는 연금금 재산의 소유와 운용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신탁의 본성상, 공사 연금을 막론하고 신탁 원리에 기반한 연금 제도에서는 수익자이자 연금 보험료 납부자인 가입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신탁의 원리는 연금 가입자(수익자)로 하여금 연금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

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대신 연금 운용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수탁자 책임이라는 논란이 분분하고 불분명한 책임(총של무, 주의의무 ; duty of loyalty and duty of care)이 부과된다.

수탁자 책임 분명치 않아

수탁자 의무의 이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둘러싸고 법조계와 경제학계(특히 법경제학)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까지도 수탁자 책임의 실제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현대재무이론의 ABC로 알려진 분산투자 원리가 20세기 말 수탁자 책임의 절차적 원리로 떠올랐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고 기이하다.

중세 기원의 신탁 원리가 연금 제도와 연금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금융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21세기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지금까지 신탁 원리의 영향으로 인해 연금 가입자(수익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철저히 제한·억제되어 왔다. 그 결과, 연금 가입자는 자본시장의 최고 원리인 유효성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으며 결국 연금금 운용자인 수탁자의 재량에 종속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과연 연금금 운용자가 일차리 창출이나 작업장 민주주의와 같은 금융과 이질적인 논리를 얼마나 포용할 수 있을까?

갔는데 외국인 신부 선생님이 찬조 출연하여 아코디언을 연주하셨다. 바람통을 좌우로 열면서 어쩌나 흥겨운 연주를 하시는지 나도 꼭 배워보고 싶었다. 세월이 흘러 마음먹은 지 만 백년 가까이 되었다. 며칠 전 버나드 쇼의 ‘우물쭈물’이 생각나서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아코디언 강습소를 찾아갔다. 팔손이 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대부분 육칠십 대였다. 나는 막내 축에 들었다. 인생 후반의 재롱 잔치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분이 들었다. ‘좀 더 일찍 올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선배님들이 젊은 나이에 시작했다는 축하해주었다. 뜻대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다며 늦게 배운 것을 자책했다.

악기를 다루는 것은 가능이고, 기능은 반복이 왕도다. 지내기에 어느 날부터 딴 고 견느나고 물어본 순간 발이 꼬여서 기 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생각과 이론이 아니라 되풀이 연습이다. 나이 들어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여유 있는 시간을 의지적으로 활용한다면 화음과 가락이 양 손가락에서 피어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인문학적으로 하고, 생활은 예체능으로 해야 심신에 균형 있는 행복이 깃든다고 한다. 한 종목 바로 시작해 보시지요.

교단에서



김 진 구  
우산중 교감

새해를 맞이한 지 한 달이 되어 간다. 주고받은 답답이 아직도 가슴에 파스하게 남아 있을까. 연초에 다짐한 계획들은 잘 실천되고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포기하고 작년의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극작가 버나드 쇼가 자신의 묘비명에 남긴 글이다.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논란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사점은 더 크다. 94세로 장수했고 노벨문학상까지 받았기에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하려는 수많은 명언을 남겼다. ‘나는 10년 도전하면 9년 실패를 했다. 그래서 10번째 도전했다.’는 말도 실행을 미뤄 두고 미적거린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한다. 작심삼일로 끝났다고 해서 실망했거나, 아직도 망설

축제를 위하여

이는 일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일이다. 새해는 일 년 단위로 오지만 새날은 날마다 오지 않는다.

지난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의미 있는 두 행사가 참여했다. 연말에는 학교 축제가 있었다. 학교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은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였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체육 대회에 큰 의미를 두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있고, 축제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기 위해 동아리 활동에 열정을 쏟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큰 행사이다. 이번 축제는 독주나 독창 등 개인의 특기를 보여주기도 하는 반 전체가 무대에 올라 공연한 것이 많아서 좋았다.

한 학급 모두가 출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함께 연습해야 한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급우 간의 협조와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더불어 교육’이다. 한란한 조명 아래 선생님과 친구들의 환호를 받으며 급우들과 함께 했던 공연은 오랫동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나는 하린 대 지방의 연주료 이 축제에 참여했다. 공식 데뷔 무대였다. 떨리고 박자를 놓치기도 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들과 합주를 하고 싶다.

연초에는 손주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재롱 잔치’에 다녀왔다. 300석 규모의 큰 무대에서 36명의 어린이가 두 시간 동안 펼치는 공연은 놀라웠다. 네 살과 다섯 살로 나누어 수차례 보여준 재롱은 순수한 동화 나라였다. 종종중, 아장아장 모형을 바꿔가며 선보이는 율동. 여기에 간혹 미소까지 보여주니 어쩌나 오진지 객석의 가족들은 응원 팻말을 흔들며 애기 이름들을 불렀다. ‘잘 한다’고 소리소리 성원이었다.

객석에 앉아 환호하는 가족들이 170여 명이나 한 가정에 평균 다섯 명씩 참여한 자리였다. 가장 많이 참여한 가족이 8명, 최고령 할아버지가 76세, 가장 멀리서 축하하러 온 가족이 싱가포르였다.

두 행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소중한 어린이들이 예체능의 재능으로 잘 커가다가 삼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국·영·수로 힘들어한다. 재능이나 적성에 관계없이 국·영·수 등 급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은퇴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린 아이로 돌아간다. 그러기에 다시 음·미·체로 생활해야 즐거운 노년이 되고, 행복할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

학창 시절, 시내 고교 연합 서클 축제에

기 고



김 영 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봉건제 국가의 유산을 물려받은 유럽이나 근대에 신생국으로 태어난 미국에서는 지방 자치가 활발한 편이다.

특히 연방 국가인 미국의 경우, 수도부 터가 최대 도시 뉴욕이 아닌 작은 도시 워싱턴이고, 유명한 기업의 본사도 중소 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따나라인 일본도 일인 일군제 국가이지만, ‘반’(藩)이라는 봉건 통치 유산을 이어받아 지방 자치가 발달했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국가나 한 때 사회주의 체제였던 중국·러시아·동유럽 국가들은 오늘날 중앙 집권 국가에 속한다.

지방 분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전통적인 중앙 집권 국가다. 우리나라에서 중앙 집권제가 뿌리를 내리게 된 데는, 오랜 기간 왕조 국가를 유지해온 유교적 통치 이데올로기 즉 성리학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사람은 나쁜 서술로 보내고 말은 나쁜 제주고 보내라’는 속담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오늘날 지방의 문제는 중앙 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문제이다. 지방 분권과 함께 균형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가정에서 자랐다. 서울이나 외국 유학기간을 빼놓고는 계속 광주·전남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지방의 실정과 여관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이며, 햇속 깊이 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지방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지자체와 업무적으로 협력할 기회도 많았다. 그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는 점이 많았다. 지방 대학 교수가 소멸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중앙 집권적 국가 경영 방식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따라서 하루 빨리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로 전환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지방 분권의 가치는 지방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중앙 권력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 입법권과 과세 자주권을 보장하여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방이 가진 역동성과 다양성을 국정에 잘 반영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풀뿌리 주민 자치가 강화되고 지방 정부의 자치 역량이 제고되어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 정부는 ‘갑’이고 지방 정부는 ‘을’이라는 그릇된 인식도 바로 잡아야 한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의 공공육을 살리고 지방 대학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대선 때 각 당이 공약한대로 올해 6월 지방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 투표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제1야당이 만 소리를 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개헌 이전이라도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지방 분권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개헌 이후 법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관련 법령부터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과 지방 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간 협약 제도와 광역 연합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 기관 개혁 방안 가운데 자치 경제체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 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방 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를 확대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 8 대 2에서 점차 6 대 4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복안이다.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 교부세 제도 혁신과 함께 지방 교부세율을 올리도록 지방 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재정 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고향 사랑 기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법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社 說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적폐 중 적폐다

중공무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채용 비리 수법이 천태만상이다. 원 채용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 부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거나 무자격자를 선발하는 정도는 ‘애교’ 수준이었다.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을 뽑으려 했음은 물론 채용 절차 없이 특별 채용한 사례 등 어처구니없는 일도 많았다.

정부는 1190개 공공기관·단체의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66%에 해당하는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을 적발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중 공공기관·단체 현직 사장과 임직원 중 채용 비리에 연루된 274명은 인사 조치기로 했다. 또한 수사 의뢰 대상인 87개 공공기관장은 해임하고, 266명의 공공기관·단체 임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 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국제금융센터의 경우 지원조차 않은 사람에게 최종 면접 응시 기회를 줬다가 탈미를 잡혔고, 한식진흥원은 고위 인사 지인의 자

녀가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데다 관련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특별 채용했다. 워터웨이플러스도 내부 고위 인사의 지시로 채용 공고 및 서류전형 등 채용 절차 없이 특혜를 주었다. 이밖에 선별 배수를 조작하거나 기존 채용 절차를 조작하는 수법도 잇따랐으며, 부정 합격자를 일단 계약적으로 채용했다가 이후 정규직으로 임용시키는 일도 있었다. 경력을 조작·왜곡하거나 특정한 합격자를 위해 우대 점수 해당자에게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채용 비리 만연은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채용권과 인사권을 가진 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 부정 채용에 관여한 자는 직위와 상관없이 파면이나 직급 강등 등의 중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인 만큼 공무원 선별과 같이 국가나 소재 광역지자체가 채용을 주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정쟁 그만 민생 챙겨야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개헌과 사법 개혁, 국민 안전, 최저임금제 등 산적한 과제를 놓고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공수처 설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대어(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특히 개헌에 대한 여야의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의 입장을 뒤집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권력구조 개편 없이 개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

치 문제도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뤄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데 비해 한국당은 공수처는 ‘육상악’일 뿐이라며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대선 한국당은 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민 안전, 최저임금 인상, 집값 상승, 교육과 가사 화해 등 민생 문제도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여야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참사 같은 대형 화재를 놓고 ‘책임론 공방’도 이어 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정쟁만 하다가 소득 없이 끝나는 과거의 전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소망 안전 관련 법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법, 지역 혁신 성장 특별법 등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다. 여야는 당리 당략만을 따지는 정쟁을 그치고 민생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우리는 하루도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말(言)에 관한 속담도 무수히 많다. ‘우리말 갈래 사전’(박승우 역음)에서 그중 몇 개를 예로 들어 보자.

“말 잘 집 장이 쓰다.” 말 많은 집은 장 맛도 쓰다, 즉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 된다는 뜻이다. “말은 보태고 떡은 떼다.” 말이란 전체 갈수록 더 보태어지고 음식은 전할 때부터 자꾸 줄어든다는 예기다. “말이란 탁해 다르고 특해 다르다”는 속담은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데 따라서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때로 말은 총칼에 맞서는 ‘부드러운 무기’가 되기도 한다. 1937년 6월 말,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장 내 스페인관이 개관했을 때의 일이다. 그곳에 있는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대작 ‘게르니카’가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은 그 해 4월 26일 나치 공군이 폭격기를 동원해 스페인 바스크 지방 소도시인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한 만행을 고발한 작품이다.

한 나치 장교가 ‘게르니카’ 앞에서 피카소에게 물었다. “이 그림을 그린 자

가 당신인가?” “아니. 이 그림의 작자는 당신들이요.” 피카소는 그림뿐만 아니라 한마디 ‘말’로도 나치와 파시즘의 만행을 명쾌하게 지적했다.

최근 끝난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에서는 승부 외에 ‘말’도 화제가 됐다. 한국 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4강 진출의 쾌거를 달성한 정현과 우승 트로피를 권 로저 페더라는 세련된 언행으로 호평을 받았다.

정현은 조코비치를 꺾은 후에도 패자를 자각하는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고, 인터뷰에서는 “조코비치가 어릴 적 우승이

었다”면서 패자를 추켜세우는 겸손함을 보였다. 조코비치 역시 “(정현은)의 심할 여지 없이 10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페더라는 우승 후 상대 마린 칠리치에게 “오늘 멋진 경기를 펼쳤다”고 했다. 또 팬들에게도 “당신들은 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존재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호주 오픈에서 선수들은 기량뿐만 아니라 언어의 품격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다. 연일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막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송기통 예방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